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강원지역업체 수주물량 확대 적정공사비 실현에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가 앞장서겠습니다!

CAK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 오인철 회관사 앞을

조달청, 시설공사 272억 입찰 내일부터 녹색평화도로 152억 등

조달청(청장 박춘섭)이 7일부터 강원도 내 272억여원의 시설공사 입찰은 진행한다. 이번 도내 입찰은 모두 적격심사로 진행되며 내주 입찰건수는 모두 5건이다. 우선 7일 개찰되는 도내 입찰은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의 신북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추정가격 54억 6200만원) 1건이다.

이어 9일 개찰되는 도내 입찰은 4건으로 강원도의 동서녹색평화도로(인제서화지구) 개설공사(추정가격 152억 1100만원)와 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의 퇴계분구 등 3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추정가격 56억 7900만원), 정선국토관리사무소의 국도 38호선 묵산 4교(상) 교면포장 보수공사(3억 4400만원), 홍천국토관리사무소의 국도 46호선 수인터널 등 3개소 비상발전설비설치공사(추정가격 4억 8700만원) 각 1건씩이다.

신관호 gwanho@kado.net

막 오른 429兆 내년도 예산전쟁

SOC투자 정상화 '갈림길'에 서다

월요기획 ZOOM » 6·7면

429조원짜리 '예산 전쟁'의 마이 올랐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6일부터 국회 예산 심의를 본격화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13일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를 하고 14일부터 소위원회 회를 가동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12월2일이다.

가장 치열한 전선은 역시 사회기반시설(SOC) 분야다. 내년 SOC 예산은 17조 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인 4조4000억원(20%)이 삭감됐다.

SOC 예산 감축은 여권의 '사람중심 성장으로의 전환'과 야당의 '성장동력 상실'

이라는 프레임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야당은 SOC 예산 감축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여당은 줄어든 SOC 예산을 일자리·복지 예산으로 돌려 내수를 살린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SOC 예산안 심의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건설업계와 학계, 지자체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건설업계는 오는 7일 SOC 예산 정상화와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연다. SOC 예산 삭감 문제를 공론화해 이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각 시·도는 별도의 특별팀(TF)을 꾸리며 국비 확보를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정부도 예산안 방어에 힘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예산

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라며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늘려주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단기간에 인프라 투자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국민 안전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경고한다.

인프라 투자는 미래 세대의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요소여서 긴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탈(脫)원전 논의처럼 미래 투자 규모에 대한 충분한 '숙의(熟議)'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오늘부터 국회서 예산 심의 정부, SOC 분야 17.7兆 편성 역대 최대 규모 4.4兆 삭감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직결 지자체 예산확보 비상체제 정치권·업계·학계도 '촉각'

국내 최대규모의 비영리 학술단체인 대한토목학회는 최근 공식의견을 통해 "건설투자 예산 삭감에 앞서 국토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이 먼저"라고 주문했다.

인프라 재투자에 적극적인 선진국들의 최신 흐름과 반대로 가는 한국의 '나홀로 역주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박수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연간 적정 인프라 투자규모는 GDP의 2.8~3.4% 수준이지만 정부안대로 가면 2021년에는 1.8%까지 떨어진다"며 "인프라 재투자를 미뤘다 막대한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는 미국도 최소한 절대 투자액을 줄인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형기자 kth@

인터뷰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SOC 투자가 기본적 복지이자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에도 가장 효과적 수단"

교통 등 인프라 시설 부족
값 비싼 사회적 비용 초래



건설업계는 'SOC 투자를 줄이면 국민복지가 나빠진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도로 총연장, 자동차 1대당 도로 총연장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통근시간은 OECD 주요국 평균인 29분의 2배가 넘는 62분이다.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시설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교통혼잡, 과도한 통근시간 등 비싼 사회적 비용을 내고 있다. 국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도 8.6㎡로 미국, 영국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의 생활공간이 쾌적하고 편리해 기본적인 생활복지가 확보된다. 그 일을 SOC 투자가 한다.

일자리를 늘리는데도 SOC 투자만 한 게 없다. SOC에 1조원을 투자하면 1만4000개의 새 일자리가 생긴다. SOC 투자야말로 정부의 정책목표인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건설업계 노력은

SOC는 단순히 대규모 토목공사가 아니라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미래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토론회와 세미나, 대국민 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다.

지난 8월과 10월에 민홍철·이우현·김도읍 의원과 공동으로 두 차례 SOC 부자 방향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오는 7일에는 추승용 의원과 함께 3차 SOC 토론회를 갖는다. 서울 건설회관을 비롯해 전국의 주요 건물에 'SOC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건설이 복지이고 일자리입니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또 SOC 투자 확대 건의를 담은 정책자료집(팬플릿)을 국회 예결위와 주요 상임위에도 배포했다.

주택시장에도 정부의 강도높은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

세 정부 들어 6·19 대책과 8·2 대책에 이어 10·24 가계부채 대책까지 벌써 부동산 대책만 세 번 나왔다. 단기적으로 이런 규제가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공급축소를 야기해 인기지역의 가격상승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아파트 집값하락 조치가 등 있던 규제는 향후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민간의 주택공급 위축을 불러와 수급불안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도 있다. 과도한 규제보다는 탄력적인 정책 추진과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건설산업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미국의 금리인상과 SOC 예산 축소, 부동산 규제 등 건설기업들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대한민국 건설역사 그 자체가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터널포인트라고 생각한다. 미래 사회를 바꾸기 위한 4차 산업혁명은 건설업이 주도할 수 없다. 건설인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뛰겠다. 건설산업이 다시 한번 한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김태형기자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인정 범위’ 넓어진다

정부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자본금 인정 범위를 다소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증기관이 질권(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나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설정한 예금, 변제가 확정된 채권, 외부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 등을 실질자산 인정 범위에 추가하는 방식이다.

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건설업 등록을 위해 건설업체

국토부, 관리규정 개정 추진

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할 때 적용하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개정해 자본금 인정 범위를 넓힌다.

지금은 보증기관이 선급금보증, 계약보증 등과 관련해 예금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지자체에 따라 자본금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업진단지침에 보증기관이 질권을 설정한 예금도 자본금으

로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질권 설정에 대한 지자체의 질의가 있을 경우 인정하고 별다른 질의가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기도 했다”며 “질권 설정을 명문화해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변제가 확정된 채권도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대출채권과 미수금 등 받을 채권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했다. 박경남기자 knp@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인정범위 넓어진다

그러나 국토부는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확정된 회생채권은 부실자산에서 제외하도록 해 자본금 인정의 폭을 확대했다.

자본금으로 인정받는 무형자산에 소프트웨어도 새로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보는 게 원칙이지만 거래명세서 등에 의해 실제성이 확인되는 소프트웨어는 취득원가에서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해 평가하도록 했다.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다. 국토부는 이연법인세부채의 경우 결업자본과 실질자본을 차감하는 부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건설업자 실태조사규정’ 제정안이 담겼다. 내년 2월부터 3년 단위의 주기적 신고제도의 폐지에 따라 연 1회 이상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를 선별해 조사하는 건설업 실태조사만 실시하게 되면서 이번에 규정을 새로 마련하게 된 것이다.

기존 건설업 관리규정의 주기적 신고에 대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따라 실태조사규정 제정에 따른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확대된 자본금 인정 범위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면서 “기업진단지침이나 실태조사 규정이 종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